

# “공항버스 중복노선 승소 확정 환영”

### 두세훈 도의원 “대법원, 교통수요 현실·공익 고려한 현명한 결정 전북혁신도시 내 공항버스터미널 신축 추진돼야 할 필요성 있어”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 2)은 “(주)대한관광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관련 대법원에서 전북도의 최종 승소판결을 환영한다”며 “교통수요 현실과 공익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이고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전북도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2015년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를 문제로 시작된 (주)대한관광광리무진과의 소송에서 전북도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판기 환송 되면서 패소 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두세훈 의원은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3월 송하진 지사를 향한 도정질문을 통해 변호사라는 전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전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를 날카롭게 질타했다.

이후 올해 1월 8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은 “전라북도의 중복노선 허용에 대해 행정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전라북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올해 5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은 파기환송심과 같은 취지로 (주)대한관광광리무진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 확정으로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편도 당 5,100원 비용 절감 및 50분 시간이 단축된다

두세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의 부실한 소송 수행 행태 지적 및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요구 등 공항버스 관련 소송을 이슈화 시켜 대법원 승소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한편 두 의원은 “전북도가 지난해 5월 유사한 법정 다툼인 ‘정읍~전북혁신도시~인천국제공항’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당해 노선운행이 중단된 점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현재 입실~전주~인천공항 버스 중복노선 10% 증회 허용 관련, 대한관광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운행허용 중회 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두 의원은 “공항버스노선 분쟁 등 관련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교통국이 승무 및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대법원 승소판결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며 “소송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각 실·국의 소송수행지원을 승무능력이 구비되고,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숙지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공항버스 중복노선 관련 승소판결 확정 후 전북혁신도시 내 공항버스노선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점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진청 등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해외출장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전북도는 신속히 전북혁신도시 내 공항버스노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당수 승객이 심야시간대에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만큼 승객안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 내 공항버스터미널 신축도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식 기자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문화상 국회의장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

# 민주 “한명숙은 강압수사 피해자”

### ‘한만호 비망록’ 공개 따라

### 김태년 “사법부·검찰, 즉각 진실 규명 착수하라” 박주민 “검찰 정치개입 의혹 반드시 해소해야”

범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세해 한 전 총리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씨의 유증 비망록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운을 뗐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단독 입수한 한씨의 비망록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한씨는 비망록에서 한 전 총리가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진박

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는데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한씨의 진술 반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은 한씨를 출석 시키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고 반문하면서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 무참히 짓밟았다”며 “검찰은 비망록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

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실될 수는 없다. 한씨는 소설가가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알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 하길 바란다”며 “법원에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우리는 한만호 비망록 이외에 다른 사실도 알고 있다. 2018년 공개된 사법 농단 문건에도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라며 “문건에 비춰봤을 때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한만호 비망록이 과연 (당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수사 검찰과 법원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개입은 오랜 (개혁) 과제이며,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오랜 검찰 개혁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관돼있다”며 “차분히 살펴봐야 할 이유다. 의문은 분명히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

### 박병석 의원,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확정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박병석 의원(68)은 언론인 출신 6선 중진이다.

1952년생으로 대전 동구 출신인 박 의원은 대전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중앙일보에 입사, 홍콩 특파원을 지냈다. 홍콩 특파원 시절에는 천안문 사태를 취재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1997년 대선 당시 대전 출신임에도 자유민주연합 대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20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해 연거푸 고배를 마셨지만 21대 국회에서 3수 끝에 민주당 내 추대 여론에 힘입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는 민주당에서 6선을 한 터줏대감으로 계파색이 옅고 당내에서 두루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인화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시스

# 인터넷 사업자, 온라인 유통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부과

###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1번방 방지법’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인터넷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석, 찬성 1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78석,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뉴시스

기존에는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회회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백도어) 설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김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가 비공개통신물도 들여다볼 수 있다”라며 일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것”이라며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하고 기술적 수준에 따라 바뀌는 부분을 일회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